

브렉시트 5년: 평가와 시사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이철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Tel: 044-414-1071)

임유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yylim@kiep.go.kr, Tel: 044-414-1064)

차 례

1.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 현황
2. 주요국과의 관계 동향과 전망
3. 평가와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0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5년간 영국 경제는 G7 및 EU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① 팬데믹의 경제 피해를 더 크게 받았고, ②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③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④ 임금상승 압력이 높으며, ⑤ 대EU 수출입이 축소되었고, ⑥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도 둔화하였음.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CPTPP에 가입하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과 자체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EU와의 관계 후퇴를 보완하고자 함.
 - 2024년 7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창조(문화)산업 AI 등에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nvest 2035 산업전략(2024년 10월)과 AI 행동계획(2025년 1월)을 발표함.
- ▶ 2024년 7월 노동당 집권 후 영국과 EU의 관계를 재설정(reset)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는 2024년 10월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무역, 안보, 이민 등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약속함.
 - 2025년 2월 키어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안보 및 국방 분야 현안을 논의했으며, 5월부터 양측의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 단 영국은 EU 단일시장 재가입이나 완전한 이동의 자유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전으로의 관계 회복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 ▶ 브렉시트는 경제통합에 대한 반발로서 발생한 고립주의가 경제에 주는 위험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통합을 지속 추구하되 그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 브렉시트는 EU 체제에 대한 불만에 더해 자유무역과 이민으로 인해 손해를 본 인구집단, 지역, 산업의 반발로 고립주의가 득세한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시도와 무역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약화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를 교훈 삼아 자유무역과 이민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함.

1.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 현황

가. 배경 및 경제 전반 동향

- [배경] 영국은 2020년 2월 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으며, 11개월간의 이행기(Transitional period)를 거친 후 2021년 1월 1일 EU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함.¹⁾
 -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진영이 51.9% 득표(찬류 48.1%)로 승리하면서 브렉시트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긴 협상 끝에 2020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 회원국 지위를 상실함.
 -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급작스러운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EU 회원국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지속되는 이행기를 둠.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관계는 2020년 12월 24일 체결된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
 - 탈퇴 협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북아일랜드의 EU 법 적용 등 문제를 포함한 영-EU 관계는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조정되고 있음.²⁾

표 1. 브렉시트 국민투표부터 무역협력협정 합의까지 주요 사건

시점	내용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진영이 51.9% 득표(찬류 48.1%)로 승리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EU에 탈퇴 의사 전달
2017년 6월 19일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 개시
2019년 10월 17일	탈퇴 협정(개정안) 체결
2020년 1월 30일	탈퇴 협정 비준 완료
2020년 2월 1일	탈퇴 협정 발효, 공식적으로 영국이 EU를 탈퇴 * 단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기를 두어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가진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지속
2020년 12월 24일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 합의
2021년 1월 1일	이행기 종료
2023년 2월 27일	영국 북아일랜드-EU 간 통상절차 조정을 위한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합의
2024년 10월 2일	노동당 정부로 정권교체 후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의 브뤼셀 방문에서 영국-EU 간 관계 재설정 및 연례 정상급 회담 개최에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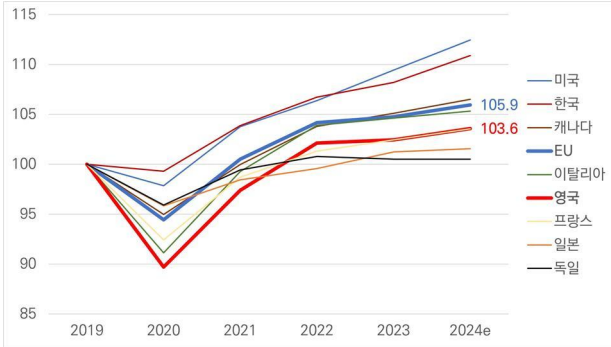
주: 중앙유럽표준시(CET: Central European Time) 기준.
자료: 조동희 외(2020)에서 최근 현황 업데이트.

1) 이철원, 임유진(2024),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상황과 금융산업 평가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p. 3.
2)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2장의 가절 참고

- [GDP] 영국의 실질 GDP는 팬데믹 첫해인 2020년 주요국 중 최대 낙폭을 보였으며, 이후 서서히 회복하였으나 EU 평균보다는 성장세가 약함(그림 1 참고).
 - 실질 GDP 추이를 보면, 영국의 실질 GDP는 2020년 10% 이상 감소하여 G7 국가³⁾와 EU 중 팬데믹의 타격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남.
 - 팬데믹 첫해에는 이탈리아(-8.9%), 프랑스(-7.6%), EU(-5.6%), 독일(-4.1%), 미국(-2.2%) 등 모든 국가에서 경제가 역성장하였음.
 - 영국은 2022년 팬데믹 이전의 실질 GDP 규모를 회복하였으며, 2024년 현재 2019년 대비 3.6% 성장하여 G7 중 중간 정도의 성장세를 보임.
 - EU 평균은 5.9%로 영국보다 높으나 EU 회원국 중 프랑스(3.6%)와 독일(1.3%)은 영국과 비슷하거나 더 약한 경제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영국 정부 및 학계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GDP가 4~10% 낮아졌다고 추산함.
 - 영국 재무부 출연 기관인 예산책임사무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15년간 GDP가 4%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음.⁴⁾
 - 한 연구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실제 연간 총부가가치는 2023년 기준 6%, 2035년 기준 10.1%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1,400억~3,100억 파운드의 손실과 맞먹음.⁵⁾
 - 다른 연구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연간 GDP 손실이 1,000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추산함.⁶⁾

그림 1. 영국 및 주요국 실질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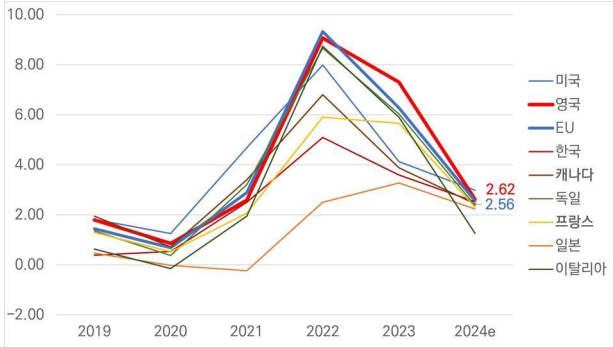
(2019=100)



주: G7, EU, 한국의 2019년 대비 실질 GDP 추이.
 자료: IMF(2024. 10.), "World Economic Outlook, 2024.1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4/10/22/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4>
 (검색일: 2025. 2. 7.).

그림 2. 영국 및 주요국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주: G7, EU, 한국의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IMF(2024. 10.), "World Economic Outlook, 2024.1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4/10/22/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4>
 (검색일: 2025. 2. 7.).

- [인플레이션] 영국은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와 전쟁발 에너지 위기라는 글로벌 요인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브렉시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인상, 노동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더 큰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음.

3)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4)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2024), "Economic and fiscal outlook," p. 37. (March)
 5) Skynews(2024. 1. 11.), "Brexit: New report suggests UK £311bn worse off by 2035 due to leaving EU."
 6) Bloomberg(2023. 1. 31.), "Brexit Is Costing the UK £100 Billion a Year in Lost Output."

- 2022년, 2023년 영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9.1%, 7.3%로 독일(8.7%, 6.0%), 이탈리아(9.7%, 5.9%), 프랑스(5.9%, 5.7%)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그림 2 참고).
 - o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에는 EU 평균(9.3%)보다 낮으나 2023년에는 EU 평균(6.3%)을 크게 상회함.
- 2024년 영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62%로 EU(2.56%) 또는 다른 주요 회원국보다 소폭 높아 물가 회복이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팬데믹과 전쟁이라는 글로벌 요인에서 기인했으나, 브렉시트 후 식료품 수입가격 및 통관 행정비용 증가와 EU 노동자 공급 축소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추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⁷⁾
 - o 한 연구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없었다면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30% 낮았을 것으로 추산함.⁸⁾

■ [노동시장]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간 인력 교류가 감소하여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팬데믹 이후 노동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비EU 이민자 유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2019년 4/4분기 대비 2024년 1/4분기 실질임금 증가율은 3.1%로 OECD 평균(1.5%)은 물론 프랑스(0.1%), 독일(-2.0%), 이탈리아(-6.9%)에 비해 더 높은 편임(그림 3 참고).
 - o 이는 영국의 생산량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로, 노동수요 증가보다는 노동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큼.
- 영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영국의 노동시장은 공급 우위 상태로, 2021~22년 고용률 증가, 실업률 감소, 평균 주급 증가, 빈 일자리(vacancies) 증가 등이 관찰되었음.⁹⁾
 - o 이러한 노동시장 경색(tightness)은 2023년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노동공급 부족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 이후 EU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은 감소했으나 노동공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비EU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전체 순이주(net migration)¹⁰⁾는 오히려 증가하였음(그림 4 참고).
 - o EU 국가로부터의 이주는 국민투표가 시행된 2016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행기가 종료된 2021년 1월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돌아섬.
 - o 그러나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은 비EU 노동자 유입 유인을 증대시켰으며 2021년부터 브렉시트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이민자가 영국으로 유입됨.
 - o 브렉시트 전후로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유럽이 아닌 다른 문화권 이민자가 늘어나자 내국인-외국인 간 갈등이 빈발하며 대규모 폭동도 발발함.¹¹⁾

7) BBC(2023. 6. 21.), "Is Brexit behind the UK's inflation shock?"; Graziano, A. K. Handley, and N. Limao(2023. 12.), "Brexit inflation: The role of trade policy uncertainty in increasing UK import prices," CEPR VoxEU; BBC(2025. 1. 15.), "UK inflation rate: How quickly are prices rising?"

8) Bakker, J. D., Datta, N., Davies, R., and De Lyon, J.(2023), *Brexit and consumer food prices: 2023 update*,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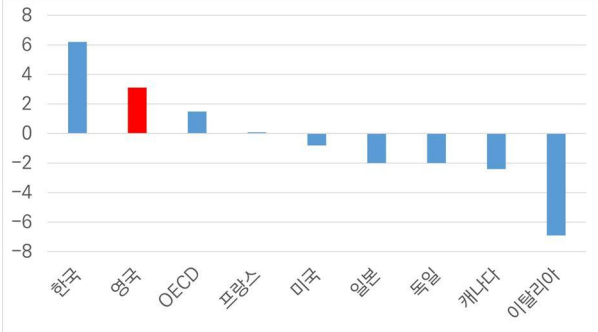
9) UK Parliament(2025), "UK labour market statistics," The House of Commons Library.

10) 해당 국가로의 인구 유입에서 인구 유출을 뺀 값.

11) BBC(2024. 8. 9.), "Why are there riots in the UK?"

그림 3. 영국 및 주요국 실질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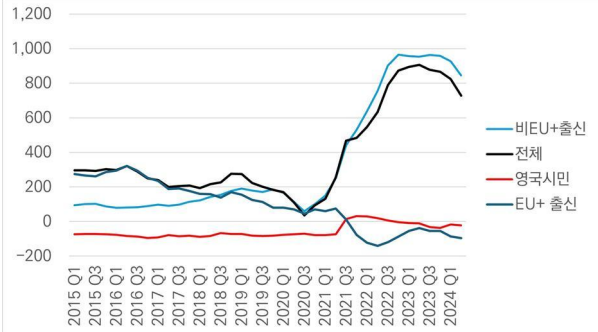
(단위: %)



주: G7, OECD, 한국의 2019년 4/4분기 대비 2024년 1/4분기 시간당 실질임금 추이. 한국, 일본, 캐나다는 2023년 4/4분기 수치.
자료: OECD(2024. 7.), "OECD Employment Outlook,"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mployment-outlook-2024_ac8b3538-en.html (검색일: 2025. 2. 7.).

그림 4. 브렉시트 전후 영국 순이민 추세

(단위: 천명)



주: 순이민은 해당국의 인구 유입에서 인구 유출을 뺀 값임; EU+에는 EU 회원국과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 포함됨.
자료: ONS(2024. 11.), "Long-term international migration, provisional: year ending June 2024,"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internationalmigration/bulletins/longterminternationalmigrationprovisional/yearendingjune2024>(검색일: 2025.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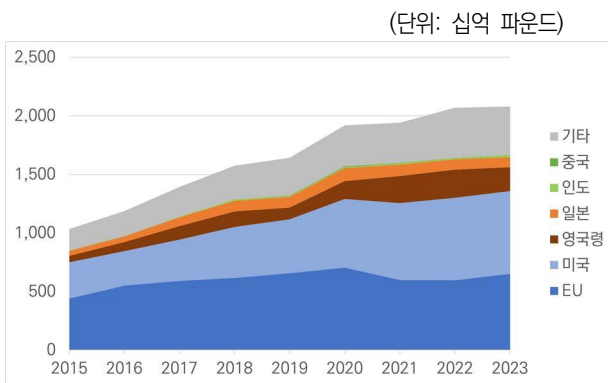
■ [무역] EU 단일시장 탈퇴로 인해 영국의 대EU 및 대세계 무역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통관 비용 증가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 2021~23년 사이 영국이 EU 단일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영국의 대EU 수출은 27%, 수입은 32% 감소하였으며, 대세계 수출입 역시 각각 6.4%, 3.1% 감소함.¹²⁾
- 예산책임사무국은 브렉시트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영국의 무역 규모가 장기적으로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¹³⁾
- 영국의 EU 탈퇴 후 1년간 약 1만 6,400개의 기업(전체의 14%)이 EU로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음.¹⁴⁾
- 영국은 EU 탈퇴 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독자적으로 가입하고 호주, 뉴질랜드 등과 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으나 EU와 무역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o 정부 무역협정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한 GDP 손실이 4%에 달하는 반면, CPTPP(0.08%), 영-호주 FTA(0.08%), 영-뉴질랜드 FTA(0.03%)의 효과를 합쳐도 GDP가 0.2%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⁵⁾
 - o 영국은 미국, 인도 등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12) Du, J., Liu, X., Shepotylo, O., and Shi, Y.(2024), *Unbound: UK Trade post-Brexit*; Freeman, R., Garofalo, M., Longoni, E., Manova, K., Mari, R., Prayer, T., and Sampson, T.(2024), *Deep integration and trade: UK firms in the wake of Brexit*.
 13)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2024), "Economic and fiscal outlook," p. 37. (March)
 14) Freeman, R., Garofalo, M., Longoni, E., Manova, K., Mari, R., Prayer, T., and Sampson, T.(2024), *Deep integration and trade: UK firms in the wake of Brexit*.
 15) BBC(2025. 1. 31.), "Five key impacts of Brexit five years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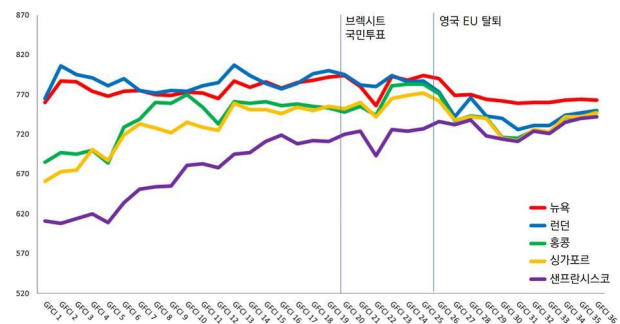
- [외국인직접투자] 영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23년 누적 기준 2조 791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0.5% 증가했으나 EU 회원국의 투자는 둔화됨.¹⁶⁾
 - EU 회원국의 영국 투자 규모는 2020년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비EU 국가에서의 투자 유입이 상승함(그림 5 참고).
 - 주요 투자 국가는 2023년 기준 미국(34.1%), 영국령 제도(9.8%), 룩셈부르크(9.1%), 네덜란드(4.5%), 일본(4.2%) 순임.
 - EU 회원국으로부터의 투자 비중은 2016년 46.5%에서 2023년 31.3%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EU 탈퇴가 공식화된 2021년에 급격히 감소함.
 - 동 기간 미국, 영국령 제도, 일본, 인도 등 비EU 국가가 전체 투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
 - 영국-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중국이 영국 에너지·자동차·인프라 등 다방면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2018~20년에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3년 0.2%로 아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FDI 프로젝트는 2023년 기준 1,555건으로 2016년 2,265건을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보임.¹⁷⁾
 - 그중 신규 투자는 1,023건, 확장투자는 357건이며, 주요 투자국은 미국(376건), 인도(108건), 주요 투자 분야는 소프트웨어·컴퓨터서비스(263건), 금융(199건), 환경·인프라·운송(163건), 첨단엔지니어링·공급망(129건) 등임.

그림 5. 주요국의 대영국 FDI 추이(2015~23년)



주: 저량 기준.
자료: ONS(2025. 1. 14.),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olving UK companies: 2023 (Figure 4),"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balanceofpayments/bulletins/foreigndirectinvestmentinvolvingukcompanies/2023>(검색일: 2025. 1. 21.).

그림 6.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수 추이
(2007. 3.~2024. 9.)



주: 그림의 가로축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수 보고서 순번이며, 해당 보고서는 2007년 3월부터 연 2회 발간되었음.
자료: Y/Zen(2024. 9.),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36," <https://www.longfinance.net/publications/long-finance-reports/the-global-financial-centres-index-35/>(검색일: 2025. 2. 6.).

16) ONS(2025. 1. 14.),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olving UK companies: 2023 (Figure 4),"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balanceofpayments/bulletins/foreigndirectinvestmentinvolvingukcompanies/2023>(검색일: 2025. 1. 21.).

17) GOV.UK(2024. 7. 24.), "DBT inward investment results 2023 to 2024,"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dbt-inward-investment-results-2023-to-2024/dbt-inward-investment-results-2023-to-2024-html-version>(검색일: 2025. 2. 12.).

나. 산업별 현황

■ [금융] 브렉시트 이후 취약해진 경제 상황에도 영국 금융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은 지금까지로 고전하고 있음.

- 금융·보험 산업은 2023년 총부가가치 기준으로 영국경제의 8.8%를 차지하며, 법, 회계 등 관련 전문서비스 까지 고려하면 총 13%를 차지함.¹⁸⁾
 - 영국 금융산업 고용자 수는 약 140만 명으로 전체의 5% 수준이지만 부가가치 창출은 13%로 높음.
 - 금융·보험 산업은 브렉시트,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고금리, 고물가 등 여러 복합 요인에도 불구하고 크게 위축되지 않았으며, 영국은 세계 최대의 금융서비스 순수출국으로 분석됨.¹⁹⁾
 - 2023년 기준 금융서비스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0.7%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영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1위 금융서비스 순수출국(981억 달러)임.²⁰⁾
 - 또한 금융서비스 분야는 영국의 FDI 최대 투자산업이면서 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분야임.²¹⁾
 - 영국 런던은 후발주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발표된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수(GFCI 36)에서 미국 뉴욕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함(그림 6 참고).²²⁾
 - 영국 런던은 보험업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숙련 노동력, 업계 평판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홍콩(3위), 싱가포르(4위) 등 후발주자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영국의 주식시장은 △ 저조한 신규 기업공개 실적, △ 대규모 상장폐지 및 이탈기업 등으로 기업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²³⁾
 - 2024년 기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신규 기업공개 수(IPO)가 1년간 17건에 불과했으며 88개의 회사가 상장을 폐지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이탈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임.²⁴⁾
- * 런던거래소의 신규 기업상장 수: 126개(2021년) → 45개(2022년) → 23개(2023년) → 17개(2024년)²⁵⁾
- * Ashtead(산업장비 임대업체)가 2024년 12월 런던거래소에서 뉴욕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FLUTTER Entertainment(도박업체)와 영국의 유수 반도체 설계업체 ARM 홀딩스, CRH(건축자재회사)가 뉴욕에 상장, JUST EAT(음식 등의 배달업)는 상장폐지함.²⁶⁾

18) TheCityUK(2025), "State of the sector: annual review of UK financial services 2024"(검색일: 2025. 1. 21.).

19) 자세한 내용은 이철원, 임유진(2024),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상황과 금융산업 평가 및 시사점」 참고

20) TheCityUK(2025), "Key facts: about the UK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2024."

21) 영국 통계청(2025. 1. 14.),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olving UK companies: 2023 (Figure 4),"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balanceofpayments/bulletins/foreigndirectinvestmentinvolvingukcompanies/2023>(검색일: 2025. 1. 21.).

22) Long Finance & Financial Centre Futures(2024. 9.),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36," <https://www.longfinance.net/publications/long-finance-reports/the-global-financial-centres-index-36/>(검색일: 2025. 1. 21.).

23) 이는 영국 및 유럽 산업경쟁력 전반의 약화와 더불어, 자금 조달 규모가 크고 상장이 용이한 미국시장으로의 이탈로 인한 것으로 보임.

24) EY 보도자료(2025. 1. 6.), "London stock exchange ends a challenging 2024 on a high after Q4 IPO boost," https://www.ey.com/en_uk/newsroom/2025/01/london-stock-market-ends-2024-on-a-high-after-q4-boost(검색일: 2025. 1. 21.) 참고 다만 2024년 런던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IPO 건수는 17건으로 집계되어 17건으로 수정함.

25) London Stock Exchange(2025. 1. 5.), "New Issues&IPO Summary."

26) Guardian(2024), "FTSE group Ashtead to shift primary listing to New York in blow to UK"; London South East(2024. 12. 27.), "In Brief: Just Eat exits London Stock Exchange to focus on Amsterdam," Reuters(2024. 2. 14), "In latest snub to London, travel firm TUI flies to Frankfurt."

■ [자동차]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며, EU 의존도가 여전히 높으나 그 정도가 다소 약화함.

- 자동차 및 관련 산업은 영국의 제조업 중 최대 수출 산업(13%)으로 영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으로 2023년 기준 자동차 및 관련 산업의 수출액은 브렉시트를 포함한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대치를 기록함(455억 파운드).²⁷⁾
 - 영국에서 제조된 승용차의 절반 이상(2023년 기준 57.6%)²⁸⁾이 EU 회원국으로 수출되며,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이 EU와 연계되어 있어 브렉시트 논의 당시 타격이 큰 분야 중 하나로 여겨졌음.
 -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행 이후 일부 자동차 기업이 영국의 생산기지를 EU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했는데 이는 △ 브렉시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 영국 내 자동차 판매 감소, △ 디젤 차량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됨.
 - * 자동차 기업 혼다는 2022년 유럽 생산기지인 영국 스윈던(Swindon) 공장을 폐쇄하였으며 닛산은 2019년 X-트레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생산 계획을 취소하였는데, 이는 영국 내 자동차 판매 감소, 디젤 차량 수요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됨.²⁹⁾
 - *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랜드로버 디펜더 등을 생산하는 JLR은 영국에서 레인지로버는 계속 생산하고 있지만, 랜드로버 디펜더 생산공장을 2018년 영국 솔리힐(Solihull)에서 EU 회원국 슬로바키아로 이전³⁰⁾
- 다만,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해 대EU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함.
 - 영국 자동차 산업의 대세계 수출액에서 EU 비중은 지난 10년 중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된 2016년에 정점(45.7%)을 기록한 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폭 회복했음에도 2023년 기준 41.7%로 감소함.³¹⁾
 -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대EU 수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³²⁾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무역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통관절차와 같은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됨.³³⁾

■ [에너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³⁴⁾

- 브렉시트 이전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내부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조달했으나, 에너지 분야는 영-EU 간 협상에서 제외되면서 내부 거래 지위를 상실함.

27) 제조업 중 자동차 및 관련 산업 비중은 영국의 활동별 상품통계분류(Classification of product by activity) 기준 C. 제조업의 수출액에서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수출액의 비중으로 산출된 수치이며, 자동차 및 관련 산업 수출액은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수출액(명목) 기준임. ONS, "UK trade in goods by classification of product by activity," <https://www.ons.gov.uk/businessindustryandtrade/internationaltrade/datasets/uktradeingoodsbyclassificationofproductbyactivity/>(검색일: 2025. 2. 12.).

28) Statista, "Distribution of cars exported from the UK in 2023, by main export destination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8970/destination-of-cars-exported-from-the-united-kingdom/>(검색일: 2025. 1. 23.).

29) BBC(2019. 2. 3.), "Nissan 'U-turn' expected on new X-Trail SUV in Sunderland"; Reuters(2019. 2. 19.), "Honda to shut UK car plant in 2022 with the loss of 3,500 jobs."

30) Telegraph(2025. 2. 3.), "Jaguar Land Rover EU factory move backfires as tariffs loom."

31) 자동차 산업(영국의 상품통계분류기준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대세계 수출액에서 EU 비중 변화. ONS, "UK trade in goods by classification of product by activity," <https://www.ons.gov.uk/businessindustryandtrade/internationaltrade/datasets/uktradeingoodsbyclassificationofproductbyactivity/>(검색일: 2025. 2. 12.).

32) 각주 30번 자료 중 29.3. 자동차 부품 수출액 기준으로 작성

33) SMMT(2024), "UK Automotive Trade Snapshot," p. 13, <https://www.smmt.co.uk/reports/uk-automotive-trade-report/>(검색일: 2025. 2. 4.).

34) Energy UK(2024. 10. 24.), "Energy UK Explains: The cost of the UK-EU relationship for energy," <https://www.energy-uk.org.uk/publications/energy-uk-explains-the-cost-of-the-uk-eu-relationship-for-energy/>(검색일: 2025. 1. 20.).

- EU 내부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전력 거래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거래를 설정해 놓는 ‘single day-ahead coupling’ 방식으로 운영되며,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영·EU의 무역협력협정(TCA)에 따라 전력거래협력 방안인 MRLVC(Multi-Regional Loose Volume Coupling)가 도입될 예정이나 적용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EU 에너지 업계는 기존 시스템으로 회귀를 촉구하는 서한을 양측 정부에 전달하였음.³⁵⁾
- 영국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 노르웨이,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로 전기를 수출입하고 있는 데, 브렉시트 이후 거래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³⁶⁾
 - 영국 에너지협회인 Energy UK 추산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에너지 거래비용 손실이 매년 1억 2,000만 ~3억 7,000만 파운드에 달함.
 - 또한 EU는 2026년부터 수입되는 에너지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영국은 EU로 수출되는 에너지에 추가로 8억 파운드의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11월 EU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과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처음으로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에너지 분야 또한 ‘Reset’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밝힘.

■ [디지털·혁신] 영국정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혁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

- 영국 디지털 산업의 총부가가치는 2010~22년 81.3%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영국경제(21.5%)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함.³⁷⁾
- 영국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지만,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 기술 역량과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보유함.
 - 영국은 유럽 내 유니콘(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 1/3을 보유한 국가이며, 영국의 기술 스타트업은 지난 2023년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213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임.³⁸⁾
 - 2024년 StartupBlink의 전 세계 스타트업 허브 중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창업 생태계가 우수한 국가로 제시되며, 핀테크,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³⁹⁾
- 이에 영국정부는 ‘Invest 2035(2024년 10월)’ 산업전략 녹서를 발표하여 디지털·기술을 포함한 8개의 성장 주도 산업을 선정하고 10개년 계획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글상자 1 참고).
- 특히 영국정부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기회 행동계획(2025년 1월)’을 발표했으며, AI 안전 관련 규범 마련을 주도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AI 안전 정상회담(2023년 11월)’을 추진하고 국가지원기관인 ‘AI 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를 설립함.
 - AI 규제를 선제적으로 법제화한 EU와 달리 영국은 AI 안전 관련 국제협력을 도모하여 국제표준 마련을 주도하려는 양상임.

35) KBA Europe(2024. 10. 16.), 「영국과 EU 에너지 업계, 브렉시트 이전 단일 에너지 가격 체제로의 복귀 촉구」, <https://kba-europe.com/boards/kba-daily-hot-line/?mod=document&uid=24834>(검색일: 2025. 1. 21.).

36) Energy UK(2024. 10. 24.), “Energy UK Explains: the cost of the UK-EU relationship for energy,” <https://www.energy-uk.org.uk/publications/energy-uk-explains-the-cost-of-the-uk-eu-relationship-for-energy/>(검색일: 2025. 1. 21.).

37) GOV.UK(2024. 11. 27.), “Digital Sector Economic Estimates Gross Value Added 2022(provisional),”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dcms-and-digital-sector-gva-2022-provisional/digital-sector-economic-estimates-gross-value-added-2022-provisional>(검색일: 2025. 1. 23.).

38) UK Government, “Technology,” <https://www.great.gov.uk/international/investment/sectors/technology/>(검색일: 2025. 1. 23.).

39) StartupBlink(2024),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 Report 2024,” <https://lp.startupblink.com/report/>(검색일: 2025. 1. 23.).

글상자 1. 영국 신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 Invest 2035: 영국의 현대 산업전략 녹색(2024년 10월 발표)
 - 영국 신정부 집권(2024년 7월) 이후 첫 산업정책으로, 유망 성장산업을 선정하고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10년 계획을 제시
 - 본 산업전략은 녹색(Green paper)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취합 후 2025년 봄에 유망 성장업 계획 및 전략을 발표할 전망
 - 영국은 둔화된 생산성, 낮은 투자, 지역간 격차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함.
 - 정부의 주도 성장 목표 제시: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성장 우선순위에 자금 집중, 투자 장벽 해소를 통해 탄소중립, 지역 성장, 경제안보 및 회복력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8개의 성장주도 산업 지정: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창조(문화)산업, 방위, 디지털과 기술, 금융서비스, 생명과학,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 인력 및 기술, 혁신지원, 에너지 및 인프라, 규제환경과 양자·다자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투자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법적 지위를 획득한 독립적인 상설 기구인 '산업전략위원회' 설립 발표
- AI 기회 행동계획(AI Opportunity Action Plan, 2025년 1월 발표)
 -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의 맷 클리포드 장관이 제안한 AI 기회 행동계획 50가지 권장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모두 추진하고 정부의 대응을 제시함.
 - 해외 AI 인재 유치 및 영국 미디어 자산 교육 데이터 세트 구축 부문은 부분적으로 고려
 - 영국 전역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AI를 도입하기 위한 향후 10년간 AI 관련 행동계획임.
 - 현재 영국은 Vantage Data Centres(데이터센터, 120억 파운드 투자), Nscale(데이터센터 인프라 지원, 25억 달러 투자), Kyndryl(1,000개의 AI 일자리 창출 목표) 등 민간 선도기술 기업의 140억 파운드 투자 및 1만 3,250개 일자리 창출 계획 확보
 - 데이터센터, 최첨단 슈퍼 컴퓨터 시설 등의 투자 확대 등 충분하면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AI 인프라 구축
 - AI 성장구역(AIGZ: AI Growth zone) 조성: AI 데이터센터 설립이 용이한 구역 설정, 공공-민간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 영국 원자력청 본부가 위치한 Culham에 첫 AIGZ를 조성하여 100MW 용량의 데이터센터 구축(향후 500MW 용량 확보)
 - AI 에너지 협의회 설립
 - 공공 데이터 구축 및 공공 데이터의 민간 접근 정책 개발
 - AI 전문가, 창업자 등의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자료: GOV.UK(2024), "Invest 2045: 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invest-2035-the-uks-modern-industrial-strategy/invest-2035-the-uks-modern-industrial-strategy>; GOV.UK(2025),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government respons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i-opportunities-action-plan-government-respons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1. 21).

2. 주요국과의 관계 동향과 전망

가. 영-EU 관계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관계는 2020년 12월 24일 체결된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통해 설정되었으며, TCA에는 무역, 운송, 에너지, 어업, 법 집행, 사회보장 협력, 연구개발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⁴⁰⁾

- [상품 무역] TCA는 EU의 무역협정 중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전 품목에 무관세, 무쿼터를 적용한 최초의 협정으로, 이행기 종료 후에도 무역의 연속성을 보장함.

40) TCA의 상세 내용은 조동희, 오태현, 윤형준(2020),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39 참고.

- 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조치에서는 개방 수준이 약화함.
 - 또한 역외 무역에 대한 통관 절차가 적용되어 무역비용이 증가함.
- [서비스 무역] 상호 시장 접근, 내국인 대우 등에 대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영국이 EU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양한 제약 조건을 정함.
- [금융서비스] 영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EU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패스포팅 권한이 종료되고, EU의 동등성 및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TCA 내에서 상호 인정되는 전문직 자격에 대해 TCA 체결 당시 합의하지 않았으며, 현재 구체적인 안을 협의하고 있음.
- 영-EU 관계의 핵심 쟁점인 북아일랜드의 EU 단일시장 접근 여부는 브렉시트 협약 내 북아일랜드 프로토콜(Northern Ireland Protocol)로 관리되다가 2023년 2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로 대체됨.
- 북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통해 사실상 EU 단일시장 접근이 가능하며, 북아일랜드의 반발로 인해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난항을 겪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시절인 2020년 2월에 발효되었으며, 이행기가 끝나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됨.
 - 본 프로토콜에서는 영국 본섬(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북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상품이 북아일랜드 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더라도 북아일랜드 항구에서 통관절차를 실행, 북아일랜드에 EU 부가가치세 기준을 적용함.
 - 그러나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은 △ 무역 방해 및 우회, △ 상당한 비용 발생 및 관료주의, △ 영국 내 타 지역 대비 북아일랜드 주민들에 대한 혜택 감소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음.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는 '북아일랜드 프로토콜' 조건을 거부하려는 영국 측의 시도에 의해 관계가 악화된 바 있음.⁴¹⁾
 -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EU 공동 논의를 위해 EU 외교 이사회 회의에 영국이 초청되면서 양측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고,⁴²⁾ 이를 계기로 2023년 2월 EU 단일시장에 남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함.⁴³⁾
 -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상품이 북아일랜드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녹색선; 간소화된 통관 절차 및 서류작업)와 EU로 다시 이동하거나 이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적색선; 일반적인 통관절차 적용)를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설정함(그림 7 참고).
 - 이에 따라 애완동물, 소포, 의약품 등의 이동 절차가 간소화되고, 영국 중소기업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미부과, 북아일랜드에서의 즉각적인 소비를 위한 알코올 음료나 설치장소가 고정된 상품(예: 열펌프)과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 영국 VAT 기준이 적용됨(표 2 참고).
 - 상기 합의에는 '스토몬트 제재장치(Stormont brake)⁴⁴⁾를 포함하여 북아일랜드에 적용된 EU 법률이 지역

41) Tidey, Alice(2022. 5. 10.), "Sinn Fein's historic win in Northern Ireland may not change anything for the Brexit negotiations," euro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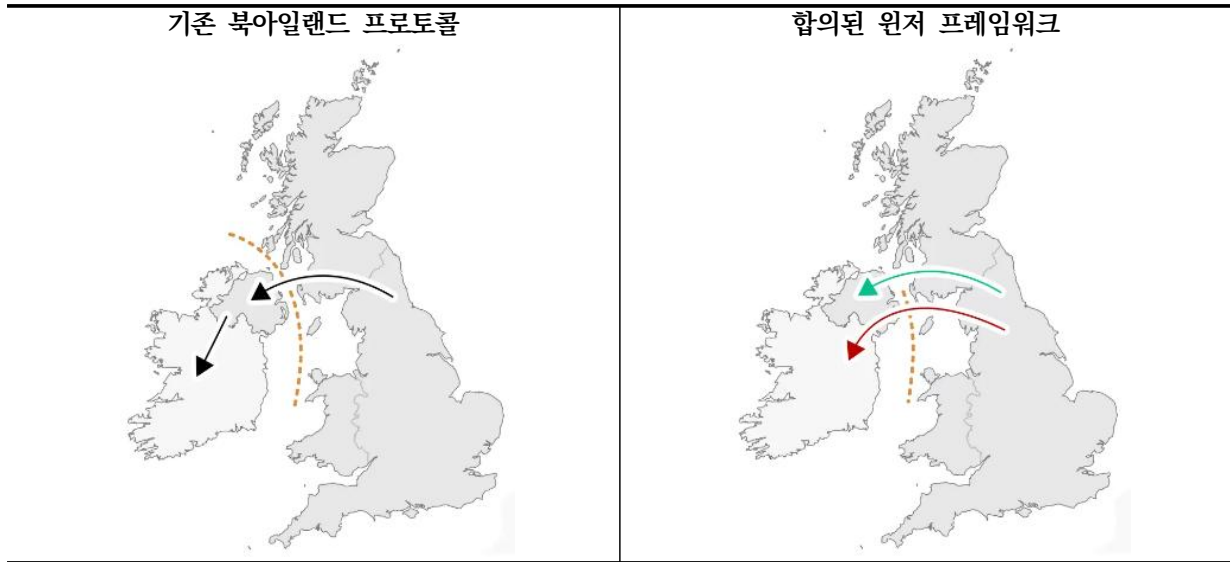
42) Castle, Stephen(2022. 3. 4.), "How a War Helped Ease a Rift Between Britain and the EU,"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7 March 2022.

43) Gallardo, Cristina(2022. 3. 4.), "Putin blows up Brexit," Politico, Retrieved 7 March 2022.

44) 북아일랜드 의회 의사당이 위치한 벨파스트(Belfast)의 스톰몬트(Stormont) 지명을 따 명명함.

내 심각하고 영속적인 영향을 줄 경우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 30인의 요청을 통해 영국정부가 EU 법률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함.

그림 7. 수정된 협약으로 인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로의 상품 통관절차 변화



주: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 최종 소비 상품에는 녹색선, 아일랜드/EU로 이동 상품에는 적색선 적용.
 자료: 이현진(2023), 「[KIEP 동향세미나] 영국-EU, 브렉시트 협약 수정 합의」,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43683&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search_area=5¤tPage=1&pageCnt=10(검색일: 2025. 1. 23.).

표 2.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의 상품 이동(녹색선) 관련 합의 내용

구분	신규 합의 내용	EU 단일시장을 위한 보호장치(safeguards)
관세/ 상품 이동	✓ 신뢰 무역업자(Trusted Trader) 제도의 운영 확대	✓ 위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EU의 영국 관세 IT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실시간 접근
	✓ 요구조건 및 절차의 대폭적인 단순화	✓ 신뢰 무역업자(Trusted Trader) 및 인증 수송매체(Authorised Carrier)에 대한 강력한 인가 및 모니터링
	✓ 신뢰 무역업자들로부터 요구 데이터(상업 및 운송) 감축	✓ 시장 감시 및 집행 강화
	✓ 화물 및 모든 종류의 소포 이동을 위한 솔루션	✓ 특정 상황에서 제도 유예 혹은 종료 가능성
소매 판매 농식품	✓ 북아일랜드에 영국 타 지역과 동일한 식품 공급	✓ EU의 동식물 보건 규정 적용
	✓ 영국의 공공보건 및 소비자 보호 기준 적용	✓ SPS 점검 시설
	✓ 혼합 선적 1대당 하나의 일반 증빙	✓ 'EU 역외용(not for EU)' 라벨링
	✓ 위험도에 따라 물리적 점검을 포함한 신분 확인을 5%로 낮춤	✓ 개별 라벨링 시 이에 적합한 점검 빈도
	✓ 씨감자(seed potatoes) 이동을 위한 절차 용이화	✓ 시장 감시, 추적 및 등록 기관 목록 강화
	✓ 식물 식목 및 농기계 절차 단순화	✓ 부분 혹은 완전 간소화 유예 가능성

자료: 이현진(2023).

- 2023년 6월 영국과 EU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⁴⁵⁾ 2024년 10월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 이주 등의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⁴⁶⁾
 - 2023년 6월 28일 제러미 헌트(Jeremy Hunt) 영국 재무장관은 상기 양해각서로 EU와 영국 금융시장이 상호 연결되었다고 그 의미를 강조하며, 이에 따라 자발적 규제 협력에 대한 정기적인 논의를 위한 포럼을 설립하기로 함.
 - 2024년 10월 2일 브뤼셀 회담에서 양측은 향후 몇 달 동안 협력 강화 분야를 설정할 계획이며, 2025년 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2023년 영국에 유입된 121만 8천 명의 이민자 중 12만 6천 명이 EU 시민이었고, 2023년 6월 기준 12개월 동안 영국에 들어온 EU 시민보다 영국을 떠난 EU 시민이 8만 6천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남.⁴⁷⁾
 -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일하던 EU 시민이 비EU 국가에서 온 이민자로 대체됨.⁴⁸⁾⁴⁹⁾
- 연구개발 부문에서 2023년 9월 7일 영국은 EU 집행위원회와 EU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코페르니쿠스에 2024년 1월부터 영국을 연계국(준회원 격)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함.⁵⁰⁾
 - 2023년 12월 4일 체결된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은 EU 프로그램 참여 관련 EU-영국 특별위원회(Specialised Committee)에 의해 TCA 프로토콜 형태로 채택됨.
 - 영국 기관은 2024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타 연계국과 같이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EU 기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함.
 - EU 지구 관측 프로그램인 코페르니쿠스에 참여함으로써 영국은 최첨단 지구 관측 역량 접근이 가능하며,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에 필요한 특정 자료 접근도 가능함.
 - 단 영국은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평균 24억 3,000만 유로를 매년 EU 예산에 기여해야 하며, 이 가운데 코페르니쿠스 참여를 위해 1억 5,000만 유로를 기여할 예정임.⁵¹⁾
 - 영국은 브렉시트 이전부터 EU 연구개발 분야에서 순수혜국이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기여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나, 영·EU 간 자동수정 메커니즘에 따라 2년 연속으로 기여한 금액보다 8% 많은 기금을 받을 경우 추가 기여금을 지불해야 함.⁵²⁾

45) BBC(2023. 6. 27.), "UK to work more closely with EU on financial services."

46) COOK, LORNE(2024.10. 2.), "The UK and EU vow to mend their Brexit battered ties. They will set a new agenda and hold summits," Retrieved 3 October 2024.

47) BBC(2024. 5. 23.), "Migration: How many people come to the UK and how are the salary rules changing?" BBC News, 23 May 2024.

48) LBC(2024. 5. 23.), "Net migration drops to 685,000 after hitting record levels, as even more arrived in UK last year than previously thought," LBC.

49) Al Jazeera(2023. 6. 9.), "Europeans are almost not coming to the UK any more," Al Jazeera.

50) House of Commons Library(2023. 11. 22.), "UK participation in EU programmes: Horizon Europe and Copernicus,"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925/>(검색일: 2025. 2. 12.).

51) Express(2023. 12. 4.), "Rishi Sunak agrees to pay Brussels £2.4billion a year to join EU scheme," <https://www.express.co.uk/news/politics/1842006/brexit-deal-uk-rejoin-eu-rishi-sunak>(검색일: 2025. 2. 12.).

52) 영국은 호라이즌유럽 전신인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예산의 12.1%인 70억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이는 EU 전체 예산에서 영국의 평균 기여율(11.4%보다 높은 수치임. House of Commons Library(2023. 11. 22.), p. 31.

■ 전기차 및 배터리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영국과 EU는 2023년 12월 21일 영국-EU 간 전기차 교역 규칙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함.⁵³⁾

- 기존 TCA의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원산지 규정은 단계적 접근 방식임(1단계: 2024년 1월 1일 10% 관세 부과, 최종단계: 2027년 1월 1일).
- 이는 당초 업계역량, 국내 배터리 생산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설계되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2024년 1단계 변경사항을 2026년 말까지 유예함.
- 이에 영-EU 간 전기자동차 관세 면제로 무역이 촉진됨은 물론 기존 2024년 1월부터 무역에서 10%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함.
 - 이를 통해 최대 43억 파운드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7월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영국은 EU 및 EU 주요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2024년 10월 키어 스타머 신임총리는 브뤼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영-EU 간 관계를 재설정(reset)하기로 합의하였음.⁵⁴⁾
 -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지속되며 유럽의 결속을 위협하는 트럼프가 2025년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상황에서 영국과 EU의 관계 개선이 요구됨.
 - 정상회담에 앞서 EU는 18~30세 청년들이 최대 3년 동안 영국 또는 EU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청년 이동성 계획(Youth Mobility Scheme) 협정을 제안한 바 있음(2024년 9월 20일).
 - 양측은 무역, 안보, 이민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음.
 - 단 영국정부는 EU와의 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EU 단일시장 재가입이나 완전한 이동의 자유 보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2025년 2월 키어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EU의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안보 및 국방 분야에서 영국-EU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⁵⁵⁾
 - 본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EU는 연례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밝혔으며, 첫 회담은 5월 19일 영국에서 열릴 예정임.
- 노동당 집권 후 영-EU 관계는 다소간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영국의 EU 재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측의 협력 강화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영국정부는 EU 측이 희망하는 영국 영해의 어업권 취득을 지렛대로 삼아 전문 자격의 상호 인정 등과 같은 영국 금융산업에 유리한 협상에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음.
 - 영국이 무역, 안보, 금융 등의 부문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이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EU 측은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짐.⁵⁶⁾

53) GOV. UK(2023. 12. 21.), "Tariffs on electric vehicles avoided as UK and EU extend trade rul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tariffs-on-electric-vehicles-avoided-as-uk-and-eu-extend-trade-rules>(검색일: 2025. 2. 12.).

54) Katya Adler(2024. 12. 29.), "UK and EU look to 2025 for reset, but with little room for trade-offs," BBC.

55) BBC(2024. 2. 3.), "Keir Starmer first UK PM to join EU meeting since Brexit."

56) *Ibid.*

나. 영-미 및 영-중 관계 변화 전망

■ [영-미 관계] 영국은 EU 탈퇴 이후 미국과 자체적인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트럼프 집권 후 영-미 FTA 협상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 EU는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으며, 영국은 EU 탈퇴 이후 자체적인 영-미 FTA 체결을 추진한 바 있음.
 - 영국은 미국과 FTA 체결을 통해 0.07~0.16%의 GDP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⁵⁷⁾
 - 2020년 보리스 존슨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다섯 차례 영-미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음.⁵⁸⁾
- 미국은 영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2023년 기준 영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8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다만 영국과 미국의 통계 작성 방식 차이로 인해 미 상무부는 미국이 오히려 145억 달러의 대영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고 발표하였음.⁵⁹⁾
 - 영국은 미국의 통계를 활용하여 관세부와 필요성이 적음을 주장하고 있음.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파이낸셜타임즈와 한 인터뷰에서 “관세는 양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음.⁶⁰⁾
 - 트럼프 역시 취임 직후 EU보다는 영국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며 영국과 함께 (관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함.⁶¹⁾
 - 트럼프 취임 전 키어 스타머와의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상 간 개인적인 친분을 중요시 여기는 트럼프의 특성상 양국의 관계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⁶²⁾

■ [영-중 관계] 영국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며, 노동당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함.

- 전임 보수당 정부는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교류에도 불구하고 인권탄압, 기술 탈취 우려, 과도한 의존성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적 접근을 취한 바 있음.⁶³⁾
 - 2022년 기준 영국의 전체 교역 중 대중국 교역 비중은 약 10%이며, 중국은 영국의 최대 수입국이자 4위 수출국임.
 - 2020년대 초반부터 영국은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정의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와 자국 공급망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왔음.

57) BBC(2025. 1. 31.), “Five key impacts of Brexit five years on.”

58) Hale, A.(2024), “A U.S.-U.K. Free Trade Agreement Is Long Overdue. It’s Win-Win for Both Nations,” <http://heritage.org/trade/commentary/us-uk-free-trade-agreement-long-overdue-its-win-win-both-nations>(검색일: 2025. 2. 7.).

59) 연합뉴스(2025. 2. 3.), 「미·영 서로 '무역흑자' 통계...」英, 협상에 美통계 사용.

60) FT(2025. 1. 17.), “Keir Starmer touts relationship with Donald Trump as he seeks US-UK trade deal.”

61) BBC(2025. 2. 4.), “EU tariffs 'pretty soon' but UK can be worked out - Trump.”

62) *Ibid.*

63) 중국과 영국의 경제관계 및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는 장영욱, 이철원, 나수엽, 이현진, 임유진(2023),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23-27 참고.

- 영국의 전략은 미국과 EU의 대중국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과 유사하며, 경제적으로 협력을 계속하나 외교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임.
-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실용주의로 선화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2024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키어 스타머 총리는 국제정세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 분야에서 영-중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⁶⁴⁾
 - 구체적으로 무역, 투자, 청정에너지, 금융산업, 보건산업 등의 분야를 협력 가능 영역으로 명시함.
 - 2025년 1월 영국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향후 5년간 6억 파운드에 달하는 중국의 대영국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함.⁶⁵⁾
 - 영국정부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실용주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나, 친홍콩 시위 인사 구금, 영-중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이행 등 갈등의 소지가 있음.⁶⁶⁾

3. 평가와 시사점

- [평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의 여파로 인해 브렉시트의 독립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1장에서 살펴본 지표상 영국 경제는 유럽 및 G7 주요국에 대비하여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영국은 주요국 대비 (1) 팬데믹의 경제 피해를 더 크게 받았고, (2)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3)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4) 임금상승 압력이 높으며, (5) 대EU 수출입이 축소되었고, (6)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도 둔화되었음.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가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잘한 결정으로 판단한 응답자는 30%에 불과하였음(그림 8 참고).
 - 브렉시트가 성공적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1%만 찬성하였으며, 국민투표에서 탈퇴에 투표했던 집단에서도 찬성 의견이 22%에 불과하였음.⁶⁷⁾
 - 단 브렉시트 이후 5년(이행기 종료 후 4년)이 지났을 뿐이며 탈퇴 초기 EU와의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브렉시트의 영향은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브렉시트의 영향은 앞으로 영국이 EU, 미국, 중국 또는 기타 무역 상대국과 어떤 경제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4) BBC(2024. 11. 19.), "We want 'strong' UK-China relationship, says Star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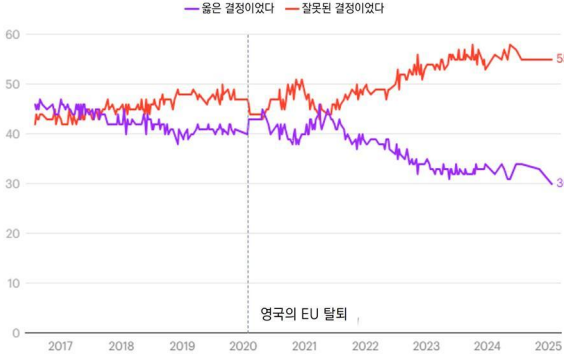
65) BBC(2025. 1. 11.), "Reeves defends China visit and hails £600m boost to UK."

66) EIU(2025. 1. 15.), "UK-China relations are set for a pragmatic restart," <https://www.eiu.com/n/uk-china-relations-are-set-for-a-pragmatic-restart/>(검색일: 2025. 2. 7.).

67) YouGov(2025. 1. 29.), "How do Britons feel about Brexit five years on?" <https://yougov.co.uk/politics/articles/51484-how-do-britons-feel-about-brexit-five-years-on/>(검색일: 2025. 2. 7.).

그림 8. 브렉시트 찬성 여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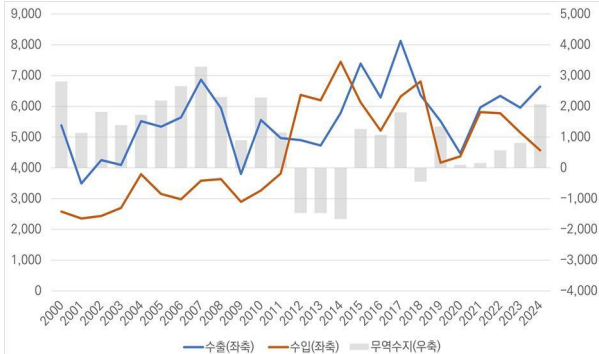


주: '지금 시점에서 돌아볼 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입니까?'에 대한 답변.

자료: YouGov(2025. 1. 29.), "How do Britons feel about Brexit five years on?" <https://yougov.co.uk/politics/articles/51484-how-do-britons-feel-about-brexit-five-years-on>(검색일: 2025. 2. 7.).

그림 9. 한국의 대영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검색일: 2025. 2. 7.).

■ [한-영 관계] 한국과 영국의 관계는 브렉시트로 인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현재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국제적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함.

-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영 수출은 66억 달러, 수입은 45억 달러로 2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그림 9 참고).
 - 한국의 대영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항공기 부품, 정제유, 배터리, 철강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자동차, 가스터빈, 의약품 등임.
 -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영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한-EU FTA 발효 후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잠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음.⁶⁸⁾
 - 브렉시트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회복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에는 전년대비 흑자폭이 크게 증가함.
- 2011~20년 사이 한국과 영국의 교역은 한-EU FTA에 따라 이뤄졌으나, EU 탈퇴 이행기가 끝난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양국간 새로 체결한 한-영 FTA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음.
 - 양국 정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선제적으로 한-영 FTA를 체결하였으며, 연속성을 위해 한-EU FTA의 조항과 양허 수준, 시점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음.⁶⁹⁾
 - 현재 한-영 FTA하에서 양국 무역 품목의 99% 이상에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일부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현재 한-영 FTA 체결 당시 합의에 따라 개선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24년 중 세 차례 협상이 진행됨.
 - 원산지 인정 요건, 직접 운송, 지리적 표시 등 EU의 맥락에서 작성된 항목에 대한 재협상 필요성에 의해 한-영 FTA 체결 시 향후 2년 내 개선 협상 개시에 대해 합의함.
 -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한-영 FTA 협상이 개시됨.

68) 당시 영국은 EU 회원국이었음.

69) 한-영 F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uk/1/>)를 참고.

- 현재 주요 의제는 원산지 누적 기준, 직접운송 기준, 투자, 정부조달, 지리적 표시 등이며, 기존 한-영 FTA(또는 한-EU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디지털 교역, 공급망, 중소기업, 기후변화 대응 등의 미래 과제 역시 새 협정문에 포함하고자 함.⁷⁰⁾
- 한편 2023년 11월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에서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며,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⁷¹⁾
 - 다우닝가 합의에서는 △ 안보, △ 경제, △ 지속가능한 미래 세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 디지털, 반도체, 우주, 양자기술 및 생물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 과 한-영 경제금융 및 공급망 대화 신설, 청정에너지 및 원전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되었음.
- [시사점] 영국의 EU 탈퇴는 경제통합에 대한 반발로서 발생한 고립주의가 경제에 주는 위험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통합을 지속 추구하되 그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 브렉시트는 EU 체제에 대한 불만에 더해 자유무역과 이민으로 인해 손해를 본 인구집단, 지역, 산업의 반발로 고립주의가 득세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EU의 과도한 간섭과 분담금 부담, 이민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이 EU 탈퇴 찬성 진영의 주요 지지 근거였음.⁷²⁾
 - 주요 연구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지역에서 EU 탈퇴 지지 투표율이 높고 반이민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됨.⁷³⁾
 - 이러한 경향은 특히 소득이나 교육수준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이거나 실업을 경험한 인구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⁷⁴⁾
 - 그러나 EU를 탈퇴한 후 영국 경제에 개선이 없었으며, 오히려 무역이 축소되어 생산비용, 물가, 생산량 등 경제 전체에 대한 부담을 늘렸으며 이민 문제 역시 기대했던 대로 해소되지 않았음.
 - 영국은 CPTPP에 가입하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과 자체 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을 추진 중이나 EU와의 경제통합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세계화와 경제통합의 부작용은 분배 정책과 공정전환 정책을 통해 소외되는 산업, 지역, 인구집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시도와 무역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약화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브렉시트의 성과와 실패를 교훈 삼아 자유무역과 이민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함.
 - 기존 무역협정을 활용, 개선함으로써 유사입장국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KIEP**

7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 11. 21.), 「한-영 FTA 3차 개선 협상…서비스·공급망·디지털 등 논의」.

71) 연합뉴스(2023. 11. 23.), 「한-영, 안보·경제협력 역대최고 수준 격상…‘다우닝가 합의’ 체결」.

72) 한겨레(2025. 1. 22.), 「트럼프, 브렉시트, 그리고 고립의 경제 비용」.

73) Colantone, I. and P. Stanig(2018), “Global competition and Brexi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2, No. 2, pp. 201-218.

74) Arnorsson, A. and G. Zoega(2018), “On the causes of Brexi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5, pp. 301-323; Becker, S. O., T. Fetzer, and D. Novy(2017), “Who voted for Brexit? A comprehensive district-level analysis,” *Economic Policy*, Vol. 32, No. 92, pp. 601-650.